

민주당, 전북현안 해결 발 맞춘다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이춘석·김춘진 등 참석 중앙·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 힘보태기'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청이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및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1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 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석 사무총장, 김춘진 도당위원장, 백재현 예산정책협의회 회장, 안호영 예산정책협의회 부회장, 김은덕 전주갑 지역위원장,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황현 도당 부위원장, 박재만 도당 원내대표, 유충중 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난 대선 승리이후 여당으로서 처

음 갖는 예산정책협의회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 또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송하진 전북지사, 이춘석 사무총장, 김춘진 도당위원장, 백재현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 이어 도청 주요현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전북도와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 성과가 있는 예산을 확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전북은 SOC 예산에서 많이 소외돼 왔

다"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이번 정부가 다담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방문한 백재현 예산정책협의회 등 중앙 정치권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친다면 전북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어려운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몇 년동안 안고 있는 전북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과연 정권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정권은 촛불 민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북의 낙후된 SOC분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성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다. 예산대 일지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 복지예산 등에 집중될 것이다. 전북은 언제까지 SOC 관련 예산에만 묶여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예산정책협의회장은 "고향이 고향으로서 전북현안과 도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말들을 잘 경청해서 중앙에 전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당초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북한 핵문제 관련 등 국정해결을 위해 불참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최대 직거래 장터 열린다

22일~24일 정보화마을서 우수 농산물 판매

전북도내 정보화마을(33개)은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한가위 큰장터' 열고 우수 농산물을 판매한다.

한가위 큰장터는 전북도내 정보화마을이 2004년부터 단독으로 개최하다가 2009년부터 마을기업, 향토산업마을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작년에는 방문객이 7만여명에 이르는 전북 최대의 직거래 장터로 자리매김하였고 올해는 정보화마을 34개의 부스 등 총 200여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추석이 다른 해보다 늦어 완숙한 사과, 배를 비롯하여 양곡류, 나물 등 1차 우리지역농산물과 한과, 편강, 고구마말랭이, 김부각 등 우리고유의 음식 등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등

을 판매할 예정이며, 또한 매일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즉석계입과 노래자랑을 통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소풍몰(<http://www.invil.com>)을 통하여 우리지역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다량구매를 원하면 각 정보화마을에 연락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특히 이번 한가위 장터에서는 판매되는 물품의 일부를 도내복지관련 시설에 기부하여 다 함께 뜻깊은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등 /김진성 기자



전국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19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병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관, 김성기 정읍시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정희 천도교교령, 이기근 동학유족회 이사장, 도의원 등 관련자 600여명이 참석해 제123주년 전국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행사를 가졌다.

화폐수급업무 5년 7개월 만에 재개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개편으로 인해 중지됐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된 지 5년 7개월 만인 20일 마침내 재개된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북권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전북지역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지 1년 3개월여 만에 얻어낸 성과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도해온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되면서 도내 금융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상공인들도 화폐를 원활히 조달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가 활기를 띌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전북도민들의 자존감회복과 호남 내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물꼬를 튼 금융산업 특화도시 조성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금융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점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에 앞장서왔다. 김 시장은 또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 협회회장을 면담하고, 한국은행 전

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전북지역 상공인들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이끌어냈다.

김 시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중심으로 환영한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더불어 전주가 금융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간 한국은행 전북지역 화폐수급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장단협의회 등 기관·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한국은행 전북, 오늘부터 실시 금융산업 특화도시 조성 기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전북지역 상공인들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이끌어냈다.

김 시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중심으로 환영한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더불어 전주가 금융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간 한국은행 전북지역 화폐수급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장단협의회 등 기관·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형 인사시스템 구축 '가속도'

맞춤형 컨설팅 최종 보고회 내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전북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맞춤형 인사컨설팅의 최종보고회를 19일 개최했다. 맞춤형 인사컨설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정부공모사업으로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도가 선정돼 9월까지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컨설팅단은 전북도 인사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인력운영 진단, 직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함께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행안부에서 인사컨설팅 종합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3가지 혁신방안으로 '인사제도 운영 활성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부서간 소통협력 강화'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타지자체·민간 벤치마킹 사례도 제안했다.

전북도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인사혁신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줘 앞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인사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전주시가 거주지가 불명확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시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불명등록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558명이다. 특히, 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대부분

이 과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와 등록기간이 길수록 소재 파악이 어려운 만큼,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락 및 면담 시도 등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고 제2017-139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구분 | 규모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
| 용도지역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2,117㎡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감 22,117㎡ | - |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 | | 22,117㎡ |
| 용도지구 | 미원지구 일반미원지구 | 27,312㎡ | 26,915㎡(감) 397㎡ |
| | 위락지구 자연위락지구 | 21,120㎡ | 21,105㎡(감) 15㎡ |
| | 도시계획시설 (소로 2-923호선) | L=544m, B=8.0m | - |

2.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실용생략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실용생략
4.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426)
6. 기타사항: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sworclodyh@korea.kr) 등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전주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